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6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수)부터 7월 21일(월)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시행규칙안 제3조, 제4조)

-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①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 4조)
-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5조)
-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시행 규칙안 제12조, 제13조)
-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 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6조, 제7조)
-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시행규칙안 제 18조)
-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17조, 제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1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 * 전화: (044) 202 - 3036, 전자우편: naong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단체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14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2025. 6. 11.

II

지역금연지원센터 10주년, 금연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 우수기관 시상 및 금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12일(목) 제주에서 '2024년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금연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성과를 되짚고, 2024년 우수기관 시상 및 실천 경험 공유를 통해 금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시도별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 및 상담사 인터뷰를 담은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 2024년 사업 성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지역

금연지원센터 10년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 2024년 우수사례 발표, ▲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출범 이후 금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 상담, 교육, 치료,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금연정책 수행의 거점 역할로 금연 실천의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작년까지 약 23만 명이 금연 캠프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등록하여 약 5만 6천 명이 금연에 성공(6개월 성공률)하였다.

*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 및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사업 수행

- 앞으로도 지역금연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센터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초 실시한 2024년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 특성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 부산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협력 모형을 개발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입원환자의 질한 특성에 따른 금연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고, 경북금연지원센터는 관계자 합동 점검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사회의 중심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라며,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지역 기반 금연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현주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함께 만든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견고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성과대회가 지역 중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142. 건강증진과. 2025. 6. 11.

III

노인학대 예방은 ‘함께’, 신고는 ‘즉시’

-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3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예방 공익 캠페인

-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 (총 40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3점

-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천오 관장은 약 17년간 전북특별자치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권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피해노인 경제적 학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대피해노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등에도 앞장서 왔다.

- 또한, 전북지역 최초로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시설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대상 AI모니터링과 ICT를 기반한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 대통령 표창은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배우 최재원씨에게 주어졌다. 부산광역시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4회 연속(’13년, ’16년, ’19년, ’22년) 최우수상 수상 등 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예방 홍보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하였다.

- 배우 최재원씨는 2010년 부터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 국민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 이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 선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부산시설공단, 양지복지센터 장삼진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변호사박선영법률사무소 박선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기 주임연구원, 서울광진경찰서 윤진우 경위, 충청북도 청주시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2024년 한 해 동안의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만 2,746 건의 학대익심 사례 중 7,167건(신고대비 31.5%)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① 신고건수 및 판정건수 모두 다소 증가하였으며(각 전년대비 3.7%, 2.0% 증가), ②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증가하고('20년 31.7%→'24년 38.7%) ③ 학대행위자의 고령화(70대 이상 '20년 30.4% → '24년 34.7%) 되는 추세를 보였다.

〈 2024 노인학대 현황 주요 특성 〉

◆ 노인학대 의심 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 다소 증가

- (신고) 22,746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 ('20) 16,973건 →('21) 19,391건 →('22) 19,552건 →('23) 21,936건 →('24) 22,746건
- (판정) 7,167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20) 6,259건 →('21) 6,774건 →('22) 6,807건 →('23) 7,025건 →('24) 7,167건

◆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 꾸준히 증가

- 최대 학대행위자는 “아들” 등에서 “배우자”로 변화
* 배우자: ('20) 2,120건(31.7%) → ('22) 2,615건(34.9%) → ('24) 3,053건(38.7%)
* 아들: ('20) 2,288건(34.2%) → ('22) 2,092건(27.9%) → ('24) 2,082건(26.4%)

- 학대피해 노인 가구형태 노인부부 > 자녀동거 > 노인독거 순
* 노인부부 2,886건(40.3%), 자녀동거 2,057건(28.7%), 노인독거 1,057건(14.7%)

◆ 학대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고령화 진행

- (피해노인) 75세이상 3,796건(53%)으로 최근 5년간 과반 차지, 고령화 추세
* 75세이상: ('20) 3,634건(58.1%), ('22) 3,901건(57.3%), ('24) 3,796건(53.0%)
- (학대행위자 연령) 70대 이상 고령자 꾸준히 증가
* 50대 이하: ('20) 3,554건(53.1%) → ('22) 3,629건(48.4%) → ('24) 3,404건(43.2%)
* 70대 이상: ('20) 2,034건(30.4%) → ('22) 2,458건(32.8%) → ('24) 2,734건(34.7%)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 배우자 등 상담·교육 강화 및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149. 노인정책과. 2025. 6. 13.

IV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 문화 예술, 맞춤형 서비스, AI 상담기술 도입 등 새로운 분야 확대

- 2025년 정부 민·관 협력 자살예방 지원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 확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한 50개 기관 중 총 14개의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종교계와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중인 창의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캠페인이나 자살 예방 교육, 수단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 문화 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 고위험군으로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 챗봇(AI)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 ▲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한 사업도 선정하고자 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문화 예술 분야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가정폭력, 학업,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다섯 사람이 서로 상처를 나누며 살자라는 희망을 나누는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극단(劇團) 비유)’, 자살 사별자의 애도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극 등 예술이 협업하는 ‘자살사별자 애도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한국심리학회)’가 선정되었다.
 - 또한 전국 최대 규모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1:1 익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사단법인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자살 사망자 유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관심과 격려, 돌봄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돌봄 프로젝트(사단법인 라이프호프)’ 등 고위험군 대상의 맞춤형 사업도 선정되었다.
 - 한편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챗봇 기술을 활용하여, 응급실에 입원했던 자살 시도자에게 기존 대면 상담 등 사례 관리 외에 추가로 자가 정신건강 평가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개입 모델을 통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대상 상담서비스(삼성서울병원)’가 새로이 선정되어 향후 그 확산 방안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정부를 넘어 범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새로 확대된 분야를 포함하여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 모두가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해진 자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생명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167. 자살예방정책과. 2025. 6. 20.

IV

국립재활원,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지킴이 양성 위한 첫발 댄다

- 전문 지도자 교육연수 운영 통해 지역 건강관리 공백 해소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행정안전부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개발과제」*에 선정되어, 「리필(Rehab+Fill)이 필요한 순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지금부터 도와줄 운동 코치로 채우다!」라는 과제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인자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서비스디자인방법론**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국민참여형 정책개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다.

** 서비스디자인: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법 및 분야

- 이번 과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지도가 가능한 운동 코치의 교육연수를 운영하고 그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어 장애인 운동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의료적 재활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재활치료 종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지도자에 의한 체계적인 운동지원이 필수적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은 미흡한 실정이다.
- 국립재활원은 재활연구소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2017년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 지도자로서의 운동 코치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2018년에는 실제 적용 가능한 6권의 교재 개발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재활연구소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체육학, 재활의학, 물리치료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계 전문가와 관련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현장 지도자의 의견을 수년간 수렴해 왔으며, 이번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는 이러한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는 참여형 과제이다.

- 이번 과제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절차에 따라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장 인터뷰, 공동설계 워크숍(Co-creation)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인이 너가 함께 정책 전 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 실현을 지향한다.
-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번 과제는 의료와 지역사회 간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은선덕 건강보건연구과 팀장은 “이번 과제는 연구목적의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약할 재활 분야 장애인 운동 코치의 역할 범위를 점검하고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초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재와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2025년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연수가 병행되며, 각각의 운영 특성과 수요자 만족도,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연수는 원광대학교 박지영 교수가 담당하며, 오프라인 교육연수는 상명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및 한국운동생리학회 백성수 교수가 운영을 맡는다. 또한 서비스디자인은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가 참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과제 전반의 디자인 설계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개발 과제를 통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운동 코치 연수 교재의 내용 구성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더불어 연수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 코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서비스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171. 건강보건연구과. 2025. 6. 20.